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불과 20년 전, 언론은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지면 신문 매체를 통해 독자들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시작된 인터넷 신문이 레거시 미디어의 점유율을 크게 잠식한데 이어 팟캐스트, 유튜브, OTT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법률이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은 기존의 법률과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리를 조화시켜 언론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언론분쟁조정기관인 위원회는 법원이 제시하는 법리를 연구·수용하기 위해 매년 각급 법원의 언론관계 민사판결을 수집·분석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초상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에 관련된 민사판결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계량화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에서 사건번호를 수집하고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열람이 불가능한 미확정판결은 개별 법원에 요청하여 회신이 이루어진 사건을 별도로 수집하였다.

판결 검색 시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 ⑥보도&음성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 ⑨기사삭제 ⑩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3. 분석 대상

가. 2021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188건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방송사닷컴 등)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188건이 수집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법원도서관 이용이 일부 제한되었던 작년 대비 수집판결건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관계없어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259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인용내용·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피고가 다수 매체인 경우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 건의 소송이라도 통계분석의 목적상 매체 수에 따라 여러 건으로 분할한 결과, 매체별 분석대상건은 총 259건이었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425건

분석 대상 판결은 대부분 단일 청구가 아니라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하는 등 청구가 병합된 형태를 보였다. 이에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총 건수 259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 청구권별 총 건수는 425건이다.

마. 통계 작성 항목의 변화

2019년도 언론관계판결분석보고서까지 작성했던 상소율, 보도유형별 통계, 조정을 거친 사건에 관한 통계 등 일부 통계들은 법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조로 인하여 강력한 비실명화 처리가 이루어져 수집되는 정보가 제한되면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의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소송 결과 등을 담고 있다.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제기 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처리 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소송 결과, 침해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라.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소송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보도문의 분량

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원고 분류
피 고	09. 매체별 피고 분류	
	10. 사건 피고구성	
	11.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 체 분 류	12. 매체분류	
청 구 별 처 리 결 과	13. 청구별 처리결과	
	13-1. 정정보도	13-4. 손해배상
	13-2. 반론보도	13-5. 기사삭제
	13-3. 추후보도	13-6. 보도금지
원 · 상 소 심 결 과	14. 심급별 결과	
	14-1. 1심	14-4. 환송후심
	14-2. 2심	14-5. 재상고심
	14-3. 3심	
기 타	15. 원고 기준 원심유지 여부	
손 해 배 상	16. 사건 청구액	19. 매체별 인용액
	17. 사건 인용액	20. 손해배상 기각사유
	18. 매체별 청구액	
정 정 보 도	21. 정정 기각사유	22 정정 각하사유
반 론 보 도	23. 반론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24. 보도의 인용 여부	27. 보도위치
	25. 보도시기	28. 활자크기 지정 여부
	26. 보도본문 길이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했다.

1) 대표 원고 분류

-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했다.
- ② 판결에서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은 공적 인물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전문인·언론인·기업인·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 사항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위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제3조 상의 공직자¹⁾를 말하며, 기존에는 별도로 코딩하였으나 공적 인물의 하위 카테고리로 조정하였다. 단,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표기하였다.
- ④ 공적 인물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지만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 ⑤ 일반인과 공적 인물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적 인물로 분류했다.

2) 매체명 분류

-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했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다면 2개의 매체로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했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보도에 관여하지 않은 외주 제작사 직원 등은 언론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언론인 개인은 보도계재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코딩하였다.

1) 국무위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5) 청구별 처리결과

-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소 사건을 포함했다.
(원고 일부승소 사건: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
-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6)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상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심의 취지와 같다면 '승유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승변복' 등으로 코딩했다.

7)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했다.
- ② 다수 매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매체별로 기재했다.
예) 'A신문사와 B신문사는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 청구액에 A신문사에 1억원, B신문사에 1억원 각각 기재
- ③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지면과 인터넷(언론사닷컴)에 동시에 보도계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가 1개 언론사이지만 매체 분류상 2개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청구액과 주문 인용액을 각 반액으로 나누어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했다.
예) A신문사에 정정보도/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지면과 인터넷 페이지에 동시에 보도계재를 요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을 1/2로 나누어 기재
- ④ 언론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했다. 단, 언론사와 언론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인용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재하였다.
예) A신문사와 담당기자가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 1억 원만 기재
- ⑤ 상소심의 판결문에 청구취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했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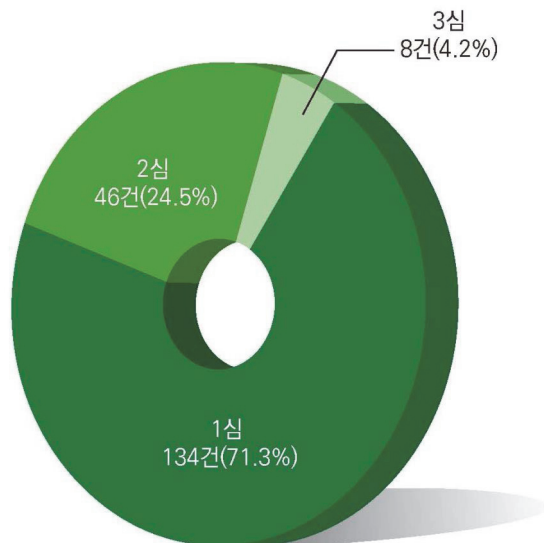
2021년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71.3%, 2심 24.5%, 3심 4.2%

분석 대상 판결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34건(71.3%), 2심(환송 후 심리 포함)이 46건(24.5%), 3심이 8건(4.2%)이다.

〈표 2-1〉 심급별 건수



2.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구분한 후 매체별로 청구한 내용을 분석하여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93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가 68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표 2-2〉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정 정	32	12.4
정정/반론	3	1.2
정정/반론/손배	18	6.9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4	1.5
정정/추후/손배	3	1.2
정정/기사삭제	1	0.4
정정/기사삭제/손배	14	5.4
정정/손배	68	26.3
반 론	8	3.1
반론/추후/손배	2	0.8
반론/손배	3	1.2
추 후	3	1.2
기사삭제	2	0.8
기사삭제/손배	5	1.9
손 배	93	35.9
합 계	259	100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청구가 210건(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정보도청구 143건(33.6%), 반론보도청구 38건(8.9%), 기사삭제 청구 26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143	33.6
반론보도	38	8.9
추후보도	8	1.9
기사삭제	26	6.1
손해배상	210	49.5
합 계	425	100

3.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이 146건(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명예훼손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6건(3.7%),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3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법익에 관한 통계는 판결문에서 법익 침해 여부를 판단한 내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기사삭제청구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침해당한 인격권을 별도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따로 통계화하지 않았다.

〈표 2-4〉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 예	166	88.3
명예/모욕/초상	1	0.5
명예/사생활	2	1.1
명예/성명	1	0.5
명예/성명/초상/재산	1	0.5
명예/신용	3	1.6
명예/신용/재산	4	2.1
명예/음성	1	0.5
명예/재산	2	1.1
명예/초상/사생활	1	0.5
명예/초상/음성	1	0.5
명예/초상/재산	1	0.5
음 성	1	0.5
재 산	2	1.1
초상/성명	1	0.5
합 계	188	100.0

4.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유형은 공적인물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117건(62.2%), 단체가 청구한 사건은 71건(37.8%)이었다.

가장 많은 원고유형은 공적 인물로 총 69건(36.7%)이 집계되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정치인이 23건으로 1/3을 차지했다.

〈표 2-5〉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개인	공적 인물	69	36.7
	일반인	48	25.5
	소 계	117	62.2
단체	기업	28	14.9
	일반단체	10	5.3
	종교단체	13	6.9
	공공단체	9	4.8
	언론사	2	1.1
	교육기관	2	1.1
	지방자치단체	1	0.5
	국가기관	4	2.1
	불명	2	1.1
	소 계	71	37.8
	합 계	188	100.0

* 공적인물 유형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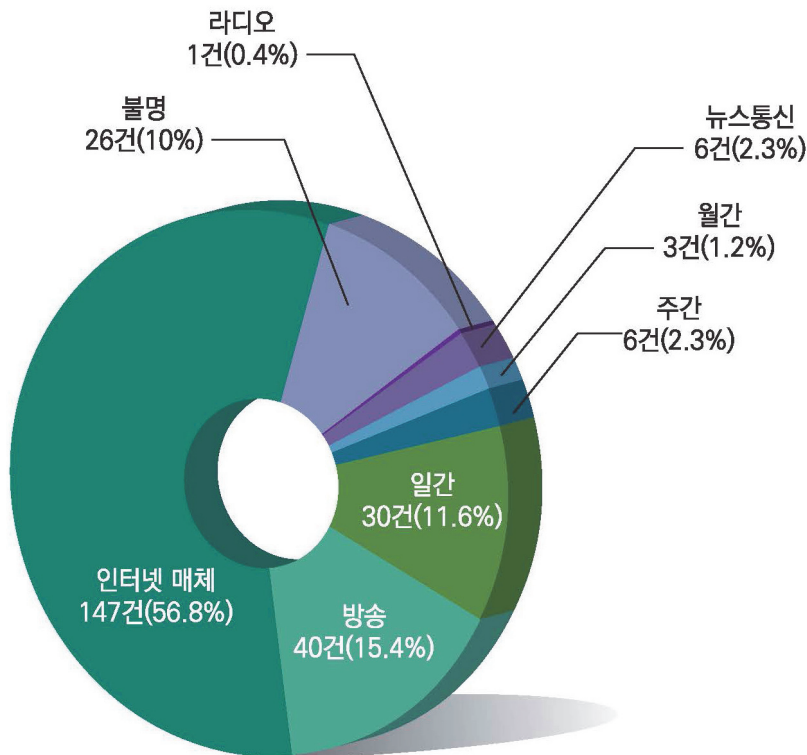
공적인물 유형	건수	비율(%)
정치인	23	33.3
전문인	13	18.9
공직자	8	11.6
언론인	5	7.2
연예인	2	2.9
기 타	18	26.1
합 계	69	100.0

5.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인터넷 신문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아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매체유형별 건수(총 259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매체가 14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송 40건(15.4%), 일간신문 30건(11.6%), 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각각 6건(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매체유형별 건수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147건)의 경우, 인터넷신문이 90건(34.7%), 신문사 및 방송사 홈페이지 등 언론사닷컴이 57건(22.0%)으로 집계되었다.

판결문상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매체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불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매체유형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청구취지에서 인터넷에 보도문 게재를 청구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인터넷신문으로 집계하였다.

6.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유형별로 분류한 259건의 피고들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01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사건이 76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방송 토론에 출연한 패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1건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2-7〉 직위별 피고 구성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101	39.0
언론사/담당	76	29.3
담 당	28	10.8
대 표	9	3.5
대표/담당	7	2.7
언론사/대표	6	2.3
언론사/부장/담당	6	2.3
언론사/대표/담당	5	1.9
국장/담당	3	1.1
대표/국장/담당	3	1.1
언론사/국장/담당	2	0.8
언론사/대표/국장/담당	2	0.8
언론사/불명/담당	2	0.8
대표/국장	2	0.8
언론사/국장	1	0.4
언론사/대표/부장/담당	1	0.4
국 장	1	0.4
기타(패널)	1	0.4
불 명	3	1.2
합 계	259	100.0

피고 분류를 다시 언론사 및 언론사 내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 200건 (50.4%), 담당 기자(PD 등) 135건 (34.0%), 대표이사(발행인 포함) 35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언론사, 담당자, 대표 순으로 피고 비율이 높았다.

〈표 2-8〉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200	50.4
대표이사	35	8.8
국 장	14	3.5
부 장	7	1.8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135	34.0
기타(불명, 패널 등)	6	1.5
합 계	397	10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침해유형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언론 관련 소송 원고 승소율은 44.1%

2021년도 언론 관련 소송을 분석한 결과 원고 승소율은 44.1%로 집계되었다. 심급별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 승소율은 42.5%, 2심(환송후심 포함)은 50.0%로 승소율이 전년 대비 다소 높게 집계되었고, 3심은 37.5%로 다소 낮았으나 분석대상판결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3-1〉 심급별 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원고 승소율(%)
1심	57	77	42.5
2심	23	23	50.0
3심	3	5	37.5
합 계	83	105	44.1

〈표 3-2〉 최근 3년간 심급별 승소율

심급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심	41.8	39.7	42.5
2심	55.1	40.6	50.0
3심	55.9	54.5	37.5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비율 90.7%

분석 대상 판결 188건 중 2심 46건과 3심 8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 여부를 조사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는지 여부(일부 인용 포함)를 기준으로 승패소를 분류한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90.7%(49건)로 나타났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판결 유지 비율은 89.2%였고, 상고심(대법원)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은 100%로 집계되어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 결과가 반복될 확률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았다.

〈표 3-3〉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반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반복	원고패소판결 반복
2심	46 (100.0)	21 (45.7)	20 (43.5)	2 (4.3)	3 (6.5)
3심	8 (100.0)	3 (37.5)	5 (62.5)	0 (0.0)	0 (0.0)
합계	54 (100.0)	24 (44.4)	25 (46.3)	2 (3.7)	3 (5.6)
		49 (90.7)		5 (9.3)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청구권별 승소율 2020년 대비 다소 상승

188건의 소송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별로 재분류하여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았다. 정정보도청구(143건) 승소율이 39.2%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 반론보도청구(38건)의 승소율은 36.8%, 손해배상청구(210건) 승소율이 34.3%로 집계되었다. 추후보도청구 승소율이 75.0%를 기록하였으나 청구 사례가 8건에 불과하여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청구권별로 계산한 원고 승소율은 35.6%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20년의 28.3%와 비교하면 다소 상승한 것이다.

※ 심급별 결과 통계에서 원고 승소율을 44.1%로 소개했으나 청구권별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하나의 소송에서 다수의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는데 일부 청구만 인용된 경우에도 원고 승소로 집계하였기 때문이다.

〈표 3-4〉 청구별 소송결과

청구	총건수	기각	각하	인용	원고 승소율(%)
정 정	143	86	1	56	39.2
반 론	38	23	1	14	36.8
손 배	210	136	2	72	34.3
추 후	8	0	2	6	75.0
기사삭제	26	23	0	3	11.5
계	425	268	6	151	35.6

4. 침해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3.4%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언론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43.4%로 나타났다.

그 외 침해유형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표본이 적어 통계로서의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

〈표 3-5〉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명 예	166	72	43.4
명예/모욕/초상	1	1	100.0
명예/사생활	2	1	50.0
명예/성명	1	0	0.0
명예/성명/초상/재산	1	0	0.0
명예/신용	3	1	33.3
명예/신용/재산	4	2	50.0
명예/음성	1	1	100.0
명예/재산	2	2	100.0
명예/초상/사생활	1	1	100.0
명예/초상/음성	1	0	0.0
명예/초상/재산	1	0	0.0
음 성	1	1	100.0
재 산	2	0	0.0
초상/성명	1	1	100.0
합 계	188	83	44.1

5. 원고유형별 결과

일반인 언론소송 승소율 평년 수준 회복

원고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공적인물 37.7%, 일반인 52.2%로, 2020년 큰 폭으로 감소(25.8%)했던 일반인의 승소율이 2019년 수준(51.4%)을 회복하였다. 2020년 일반인 승소율이 저조하게 집계된 것은 코로나 사태로 판결문 수집이 원활하지 못하여 표본이 축소된 영향으로 추측된다. 공적 인물 가운데서는 공직자, 언론인, 연예인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이 많지 않았다.

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이 각 1건, 9건으로 많지 않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기업의 승소율이 50.0%로 높게 나타나는 등 단체가 신청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45.1%)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43.6%)보다 조금 높았다.

〈표 3-6〉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개인	공적 인물	69	26	37.7
	일반인	48	25	52.1
	소 계	117	51	43.6
단체	기업	28	14	50.0
	일반단체	10	5	50.0
	종교단체	13	4	30.1
	공공단체	9	5	55.6
	언론사	2	0	0
	교육기관	2	0	0
	지방자치단체	1	1	100
	국가기관	4	1	25.0
	소 계	71	31	45.1
	불명	2	2	100
합 계		188	83	44.1

* 공적 인물 유형별 승소율

원고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공적 인물 유형	정치인	23	7	30.4
	전문인	13	3	23.1
	공직자	8	4	50.0
	언론인	5	3	60.0
	연예인	2	2	100
	기 타	18	7	38.9
	계	69	26	37.7

6. 매체유형별 결과

인터넷 매체 상대 사건의 원고 승소율 48.3%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259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 상대 소송(147건)의 원고 승소율은 48.3%(71건)로 집계되었다. 방송을 상대로 한 소송(40건)에서 원고 승소율은 37.5%, 일간지를 상대로 한 소송(30건)에서는 26.7%로 인터넷 매체 대비 낮은 승소율을 보였다.

〈표 3-7〉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인터넷 매체 (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등)	147	71	48.3
방 송	40	15	37.5
일 간	30	8	26.7
주 간	6	3	50.0
월 간	3	1	33.3
뉴스통신	6	1	16.7
라 디 오	1	0	0.0
불 명	26	13	50.0
계	259	112	43.2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인터넷신문 대상 사건에서 51.1%(총 90건 중 원고 승소 46건), 언론사닷컴 대상 사건에서 43.9%(57건 중 원고 승소 25건)로 파악되었다.

〈표 3-8〉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인터넷 매체 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인터넷신문	90	46	51.1
언론사닷컴	57	25	43.9
합 계	147	71	48.3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언론 관련 판결에서 원고측이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식이 손해배상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권과 달리 불법행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성격이 달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청구권별로 분류된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 청구액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 평균값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구액 및 인용액의 중앙값²⁾과 최빈값³⁾을 함께 조사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과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했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 34.3%

2021년 언론관계판결 분석 대상 손해배상청구 210건 중 전부 혹은 일부 청구금액이 인용된 건은 72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4.3%로 집계되어 2020년 30.4%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3) 최빈값은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이다.

2. 청구액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약 9,030만 원, 중앙값 약 3,000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건 비중 28.6%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9,030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약 3,000만 원, 최빈값은 5천만 원이었다.

손해배상청구 210건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이 60건(28.6%)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20억 원, 최저 청구액은 1백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관련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4-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관련 통계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19	272	138,495,711	62,500,000	100,000,000	1	1,300,000,000
2020	179	107,167,421	50,000,000	30,000,000	2,000,000	300,000,000
2021	210	90,298,846	30,000,050	50,000,000	1,000,000	2,0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882만 원, 인용 최고액 7,000만 원

2021년 총 210건의 손해배상청구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72건(34.3%)이다. 평균 인용액은 약 882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475만 원. 최빈값은 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용 최고액은 7,000만 원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이 대폭 하락하였으나 이는 지난 2년간 2억 원이 넘는 고액 인용사건이 통계에 포함되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표 4-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인용액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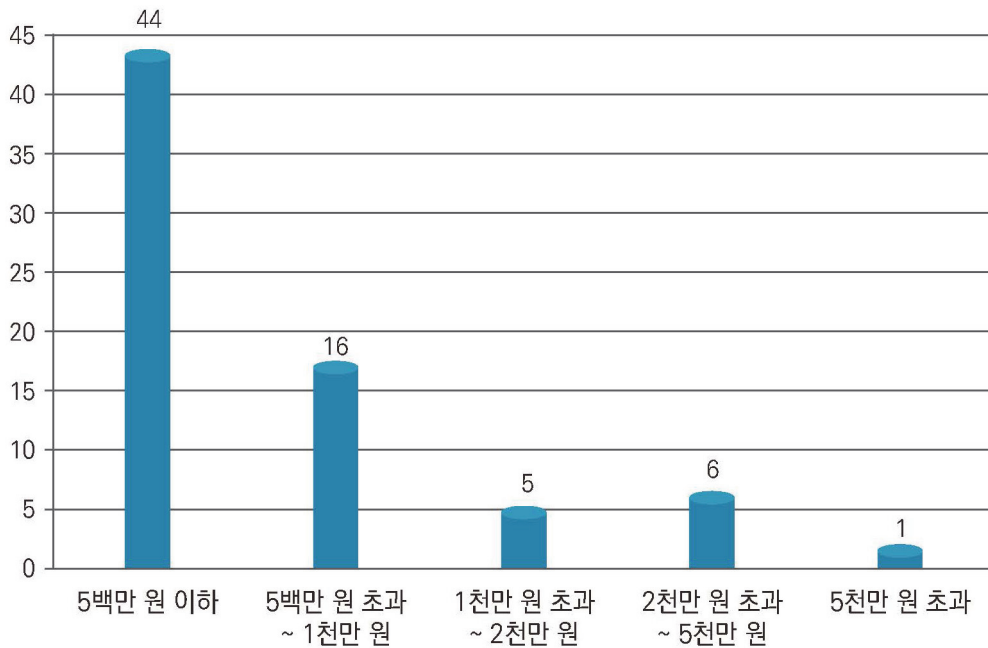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19	93	14,646,238	5,000,000	5,000,000	500,000	205,240,000
2020	55	18,013,455	5,000,000	5,000,000	1,000,000	205,240,000
2021	72	8,818,056	4,750,000	3,000,000	1,000,000	70,000,000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 5백만 원 이하 61.1%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72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44건(61.1%)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16건(22.2%),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5건(6.9%),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6건(8.3%), 5천만 원 초과가 1건(1.4%)으로 나타났다.

〈표 4-3〉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 32.0%

손해배상청구 210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한 결과,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2.0%로 나타났다.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용액 평균값은 약 809만 원, 인용액 중앙값은 4백만 원이었다.

〈표 4-4〉 침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수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명 예	181	58	32.0	8,094,828	4,000,000
명예/모욕/초상	1	1	100.0	10,000,000	10,000,000
명예/사생활	3	2	66.7	2,500,000	2,500,000
명예/성명	1	0	0.0	-	-
명예/성명/초상/재산	3	0	0.0	-	-
명예/신용	4	2	50.0	22,500,000	22,500,000
명예/신용/재산	6	4	66.7	14,816,667	7,000,000
명예/음성	1	1	100.0	7,000,000	7,000,000
명예/재산	2	1	50.0	4,500,000	4,500,000
명예/초상/사생활	1	0	0.0	-	-
명예/초상/음성	1	0	0.0	-	-
명예/초상/재산	1	0	0.0	-	-
음 성	2	2	100.0	1,000,000	1,000,000
재 산	2	0	0.0	-	-
초상/성명	1	1	100.0	3,000,000	3,000,000
합 계	210	72	34.3	8,818,056	4,75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 손해배상 승소율 상대적으로 높아

원고유형별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일반인(54건)의 승소율이 53.7%(2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적인물(85건)의 승소율은 28.2%(24건)로 손해배상청구 청구별 승소율 평균값보다 낮았다. 공적인물 중에서는 연예인(5건)의 승소율이 100%를 기록했으나 표본은 5건 뿐이었다.

기업과 일반단체의 인용액 평균값은 1천만 원을 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5〉 원고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 인	공적인물	85	24	28.2	9,916,667	5,000,000
	일반인	54	29	53.7	7,427,586	4,000,000
단 체	기 업	29	6	20.7	12,750,000	10,000,000
	일반단체	14	4	28.6	13,250,000	9,500,000
	종교단체	11	3	27.3	4,333,333	2,000,000
	공공단체	9	4	44.4	6,500,000	6,500,000
	언론사	3	0	0.0	-	-
	교육기관	3	0	0.0	-	-
	지방자치단체	0	0	-	-	-
	국가기관	0	0	-	-	-
	합 계	210	72	34.3	8,818,056	4,750,000

〈표 4-6〉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 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증양값(원)
정치인	25	6	24.0	6,666,667	6,500,000
전문인	21	2	9.5	36,000,000	36,000,000
공직자	9	3	33.3	47,000,000	5,000,000
언론인	6	2	33.3	13,000,000	13,000,000
연예인	5	5	100.0	2,400,000	3,000,000
기 타	19	6	31.6	9,000,000	8,500,000
계	85	24	28.2	9,916,667	5,000,000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승소율, 인터넷 매체 상대로 대체로 높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승소율(34.3%) 대비 인터넷 매체 상대 승소율(39.7%)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률은 18.8%로 낮은 편이었으나 손해배상액 평균값은 타 매체 대비 높게 나타났다. 뉴스통신 손해배상청구 인용액 평균값이 3천만 원으로 높았으나 인용 표본이 1건 뿐이어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표 4-7〉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방 송		32	6	18.8	12,166,667	7,000,000
일간신문		21	4	19.0	5,250,000	4,000,000
주간신문		5	2	40.0	3,250,000	3,250,000
월 간 지		1	0	0.0	-	-
뉴스통신		6	1	16.7	30,000,000	30,000,000
불 명		24	11	45.8	2,611,111	3,000,000
인터넷	인터넷신문	81	38	46.9	8,546,875	5,000,000
	언론사닷컴	40	10	25.0	5,187,500	4,000,000
	소 계	121	48	39.7	7,875,000	5,000,000
합 계		210	72	34.3	8,818,056	4,7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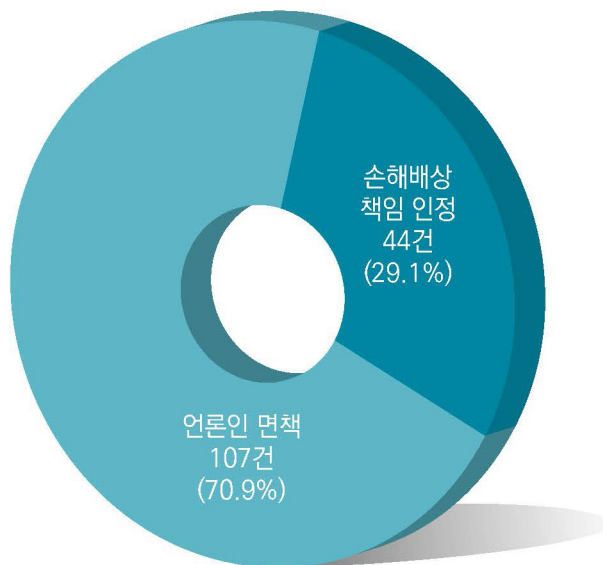
8.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언론인 상대 승소율은 29.1%

손배상청구 210건 중 언론인(대표,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단독으로 제소하거나 또는 공동 피고로 포함하여 제소한 사건은 151건(71.9%)으로 집계되었다.

151건의 청구 중 청구기각, 각하 등으로 언론인이 면책된 경우는 107건(70.9%)이었다.⁴⁾ 언론인을 포함하여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 승소율은 29.1%로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34.3%)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4-8〉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결과



4) 법원은 보도의무는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등이 인용되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경우 언론인이 면책된 것으로 집계하였다.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위원회 평균 조정액 약 209만 원, 법원 평균 인용액 약 882만 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정과정에서 중재위원 및 당사자가 손해배상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장에서 비교하기로 한다.

분석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209만 원, 중앙값은 100만 원이고,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882만 원, 중앙값은 475만 원이었다.⁵⁾

〈표 4-9〉 2020년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인용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언론중재위원회	74	2,085,000	1,000,000	60,000	15,000,000
법원	72	8,818,056	4,750,000	1,000,000	70,000,000

5)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려는 데에 의미가 있다.

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손해배상 기각의 주된 이유는 보도의 공익성·진실성·상당성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 법원은 보도가 공익성·진실성·상당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언론관련판결에서 손해배상을 기각한 판결은 보도내용이 사실주장이 아니라거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21년 매체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청구 총 210건 중 부제소합의 등으로 인하여 각하된 건이 2건, 기각된 건은 136건이다.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건의 기각 사유를 통계화하였다.

침해유형별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보도의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가 41건(3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25건(27.9%),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 경우가 25건(18.4%)으로 조사되어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주된 기각 사유로 드러났다.

아래 표에서 ‘기타’로 분류된 사유에는 피고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보도내용이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공익/상당성	41	30.1
공익/진실성	25	18.4
공익/진실/상당성	39	28.7
진실성	18	13.2
사실적시없음	4	2.9
평가저하아님	2	1.5
기타	7	5.1
합계	136	100.0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39.9%

분석대상 판결에 포함된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건은 143건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것은 총 57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9.9%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 정정보도만을 청구한 사건은 32건으로 집계되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의 청구가 병행되었다.

〈표 5-1〉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정정보도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19	165	62	37.8
2020	145	41	28.3
2021	143	57	39.9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소한 사건(86건)에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어 각하된 1건을 제외한 85건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가 51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보도가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지엽말단적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임을 이유로 기각한 건이 6건(7.1%), 진실성과 지엽말단을 동시에 기각사유로 든 경우가 6건(7.1%) 등으로 나타났다.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상당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2건 있는데, 이는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민법에 기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주장한 경우이다.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도가 공익성과 상당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사유가 된다.

보도내용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문에 나타난 주된 기각사유 위주로 통계화하였다.

〈표 5-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51	60.0
진실성/사실주장아님	5	5.9
진실성/지엽말단	6	7.1
사실주장아님	2	2.4
사실주장아님/지엽말단	3	3.5
지엽말단	6	7.1
평가저하없음	1	1.2
공익/상당성	2	2.4
기 타	9	10.6
합 계	85	100.0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36.8%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38건 가운데 원고 승소 사건은 14건으로 원고 승소율이 36.8%로 집계되었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8건이었으며 대부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를 병행하였다.

〈표 5-3〉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반론보도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19	54	25	45.3
2020	56	14	25.0
2021	38	14	36.8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반론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반론보도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사건 38건 중 인용된 사건과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 1건을 제외하면 기각된 사건은 23건이었다. 원고가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에도 원보도 내용이 사실주장이 아닌 경우, 청구하는 반론이 보도의 주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일 경우,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 보도와 무관한 경우, 이미 반론권이 행사된 경우 등에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표 5-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사실에반함	10	43.5
사실에반함/지엽말단	2	8.7
사실주장이아님	7	30.5
원보도와무관	2	8.7
지엽말단	1	4.3
기반론행사	1	4.3
합 계	23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77건으로 조사됐다.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10건, 주간신문 2건, 월간지 1건, 방송 10건, 인터넷 매체 50건 등으로 집계되었고, 인용한 보도의 유형은 정정보도 57건, 반론보도 14건, 추후보도 6건이었다. 정정/반론보도를 동시에 인용한 사건이 3건, 정정/추후보도를 동시에 인용한 사건이 1건, 반론/추후보도를 동시에 인용한 사건이 2건 있었다.

〈표 5-5〉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청구별)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계
일간신문	7	3	0	10
주간신문	2	0	0	2
월간지	0	1	0	1
방 송	7	3	0	10
라 디 오	0	0	0	0
뉴스통신	0	0	0	0
인터넷신문	26	0	3	29
언론사닷컴	13	6	2	21
불 명	2	1	1	4
합 계	57	14	6	77

한편,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위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인용된 77건에 대해 매체별 보도 위치를 조사한 결과,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5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3건,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게시되도록 한 사례가 22건으로 나타났다.

〈표 5-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매체별)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5	45.5
	1면 외	6	54.5
합 계		11	100.0
방송·라디오	첫머리	4	40.0
	후 반	3	30.0
	불 명	3	30.0
합 계		10	100.0
인터넷 매체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33	71.7
	주문상 초기화면에 게재하라는 내용 없음	13	28.3
합 계		46	100.0

※ 판결문상 매체유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언론사닷컴의 다시보기 영상 첫머리에 보도문을 추가하는 방식 등 통계화하기 어려운 일부 특이사례를 제외하였고, 보도문을 중복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 위 〈표 5-5〉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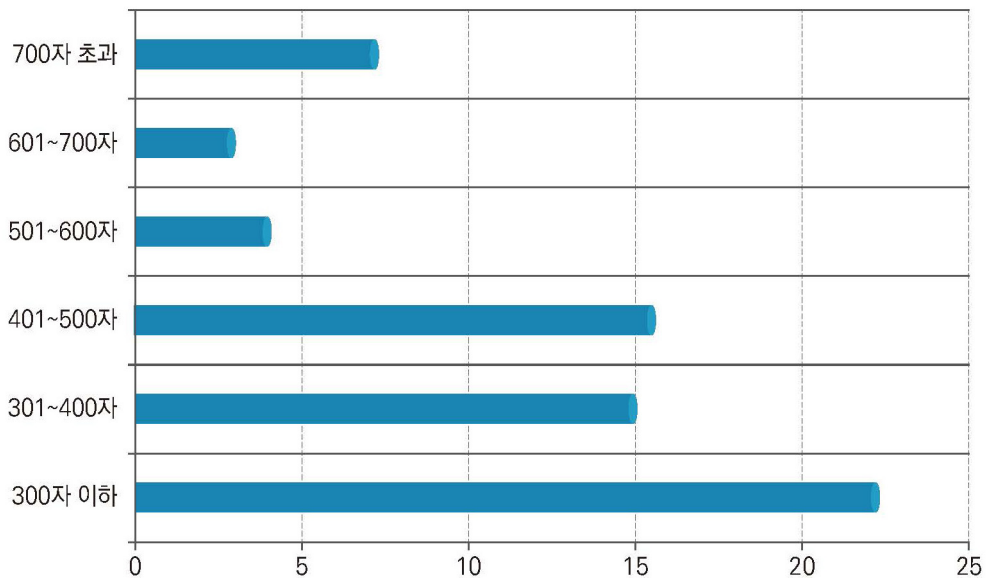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보도문 제목에 관한 통계화 중단

법원이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 보도제목형식을 통계화하기가 어려워져 2021년도 보고서부터 보도문 제목 형식에 대한 통계화를 중단하였다.

법원이 보도게재를 명한 사건에서 판결문상 보도 본문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69건을 통계화한 결과, 글자수 기준으로 300자 이하가 23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01~500자가 16건(23.2%), 301~400자가 15건(2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분석 판결 목록(민사 188건)

※ 선고일자순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	2019가소2648498	2021-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	2017가합765	2021-01-13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손배	기각
3	2020가합571003	2021-01-1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	기각
4	2019가단35458	2021-01-13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손배	기각
5	2020다270404	2021-01-14	대법	3심	정정/손배	인용
6	2019가합578350	2021-01-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7	2019가합23384	2021-01-20	수원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8	2020나47936	2021-01-21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9	2020가합533902	2021-01-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0	2019가합592790	2021-01-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1	2020가합553272	2021-01-2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	2020가단78875	2021-01-27	수원지법 안산지원	1심	손배	기각
13	2020나7241	2021-01-27	전주지법	2심	손배	기각
14	2019가단20191	2021-01-28	청주지법	1심	손배	인용
15	2019가합102102	2021-01-29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6	2019가합516116	2021-02-0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7	2020가합491	2021-02-04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18	2019나4520	2021-02-04	창원지법	2심	손배	기각
19	2020나24466	2021-02-05	대구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20	2014가단5336634	2021-02-1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21	2019가합551430	2021-02-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22	2019가합586740	2021-02-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3	2020가단5073927	2021-02-1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24	2020가합572082	2021-02-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5	2020가합574101	2021-02-17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26	2019가단5255938	2021-02-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27	2019가단264273	2021-02-25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28	2020다286263	2021-02-25	대법	3심	정정/기사삭제	기각
29	2020가합512929	2021-03-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30	2020다294998	2021-03-25	대법	3심	기사삭제	기각
31	2020나2026513	2021-03-26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32	2020나2013142	2021-03-2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33	2020다298693	2021-04-01	대법	3심	정정/손배	기각
34	2019가합564603	2021-04-02	서울중앙지법	1심	반론/손배	인용
35	2020가합569818	2021-04-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6	2020나13683	2021-04-08	수원고법	2심	손배	기각
37	2021다202101	2021-04-08	대법	3심	정정	인용
38	2020가합490	2021-04-0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인용
39	2019가단79035	2021-04-09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손배	기각
40	2019가합569516	2021-04-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1	2020나67898	2021-04-14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42	2020나52148	2021-04-15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43	2020가단534745	2021-04-16	광주지법	1심	손배	인용
44	2018가단258363	2021-04-21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45	2020가합536000	2021-04-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46	2019가합578879	2021-04-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7	2019가합584645	2021-04-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48	2020나2007772	2021-04-23	서울고법	2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49	2020나2011108	2021-04-2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기각
50	2020나2011115	2021-04-2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기각
51	2020나2011139	2021-04-2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52	2020나2011146	2021-04-2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기각
53	2020나2027608	2021-04-2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54	2020나2031676	2021-04-23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55	2020나2034385	2021-04-2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56	2020가단16285	2021-04-28	광주지법	1심	손배	인용
57	2020나20612	2021-04-30	수원고법	2심	정정	기각
58	2020나2019348	2021-04-3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59	2020가합259	2021-05-11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60	2019가소1868903	2021-05-1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61	2020가합516365	2021-05-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62	2020가합538037	2021-05-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63	2020나25023	2021-05-12	광주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64	2020가단112431	2021-05-13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기각
65	2020나2025220	2021-05-14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기각
66	2018가단57195	2021-05-25	울산지법	1심	손배	기각
67	2020가합564845	2021-05-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추후/손배	인용
68	2020나2035524	2021-05-28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69	2020가합584269	2021-06-0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70	2020가합564821	2021-06-0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추후/손배	인용
71	2020가합100353	2021-06-1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72	2020가합10353	2021-06-10	청주지법 제천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73	2020나9506	2021-06-10	전주지법	2심	손배	기각
74	2021다220352	2021-06-10	대법	3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75	2019가단5000596	2021-06-1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76	2020가단5171777	2021-06-1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77	2020가합310	2021-06-22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78	2019가합13035	2021-06-22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79	2020가합577179	2021-06-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인용
80	2020가합596835	2021-06-2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81	2020가단11730	2021-06-23	춘천지법 영월지원	1심	손배	인용
82	2020나102554	2021-06-25	대전지법	2심	손배	기각
83	2020가단5123990	2021-07-0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84	2020나2044740	2021-07-02	서울고법	2심	기사삭제	기각
85	2019가합572703	2021-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86	2019가합582397	2021-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87	2020가합599704	2021-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88	2020가합603085	2021-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89	2020가합1924	2021-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90	2020나208141	2021-07-08	의정부지법	2심	손배	인용
91	2020가단205244	2021-07-13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92	2020가합2309 2020가합2316(병합)	2021-07-14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93	2020가합42388	2021-07-1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94	2019가단19285	2021-07-20	전주지법	1심	손배	기각
95	2019가합511302	2021-07-2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96	2020가합2088	2021-07-21	서울중앙지법	1심	추후	인용
97	2020가합2095 2020가합2101(병합)	2021-07-21	서울중앙지법	1심	추후	인용
98	2021다227032	2021-07-21	대법	3심	반론	기각
99	2020가합100882	2021-07-22	대전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00	2019가단123688	2021-07-27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01	2021가합3186	2021-08-11	광주지법 해남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102	2020나86408	2021-08-11	수원지법	2심	손배	기각
103	2020나14645	2021-08-12	부산고법(창원)	2심	정정	인용
104	2020가합35083	2021-08-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05	2020가합43	2021-08-18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반론	기각
106	2020가합50	2021-08-18	광주지법 해남지원	1심	반론	기각
107	2020가단5005474	2021-08-1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08	2020가단5022165	2021-08-1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09	2020가합5186	2021-08-1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10	2020가합145	2021-08-19	수원지법 안산지원	1심	정정	기각
111	2020나2010686	2021-08-1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12	2021다236241	2021-08-19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13	2021가합30146	2021-08-2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14	2020나2036947	2021-08-20	서울고법	2심	정정	인용
115	2021가합30795	2021-08-2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16	2020나2036091	2021-08-20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17	2020나2048322	2021-08-2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18	2020가단34903	2021-08-2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19	2020가합565299	2021-08-25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20	2020가단111189	2021-08-26	대전지법 논산지원	1심	손배	기각
121	2020나2020652	2021-08-27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122	2018가합587562	2021-09-0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3	2020가합3951	2021-09-0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24	2021가합31286	2021-09-1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25	2020가단291633	2021-09-10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26	2020나2031683	2021-09-1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27	2021나12003869	2021-09-10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128	2020가합579762	2021-09-1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9	2020가합965	2021-09-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30	2020가합115126	2021-09-16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131	2020가단5300445	2021-09-2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32	2019가단76785	2021-09-30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손배	인용
133	2020가합111186	2021-09-30	서울남부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134	2020가합111643	2021-09-3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135	2020가단22561	2021-09-30	청주지법 충주지원	1심	손배	기각
136	2017가합18410	2021-10-0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37	2021나50998	2021-10-06	대전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38	2019가단549599	2021-10-07	수원지법	1심	손배	인용
139	2021가단220257	2021-10-0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40	2020가합1172	2021-10-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인용
141	2020나2024562	2021-10-08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42	2021나200709 2021나200730(병합) 2021나200716(병합) 2021나200723(병합)	2021-10-0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43	2020가합389	2021-10-12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반론/손배	기각
144	2021가단100324	2021-10-13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손배	기각
145	2020가합12890	2021-10-14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반론/추후/손배	인용
146	2020가단304638	2021-10-19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47	2020가합541231	2021-10-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48	2020가합590691	2021-10-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49	2021나300652	2021-10-21	대구지법	2심	손배	인용
150	2020가합2484	2021-10-27	전주지법 정읍지원	1심	손배	기각
151	2019가합14353	2021-10-27	청주지법	1심	손배	인용
152	2020가합113717 2020가합115471(병합)	2021-10-28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53	2020나14669	2021-10-28	부산고법(창원)	2심	정정	기각
154	2020가합37348	2021-10-2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55	2020가합1011	2021-10-2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56	2020가합109022	2021-11-04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157	2021나2001467	2021-11-05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기사삭제/손배	인용
158	2019가합106285	2021-11-10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손배	기각
159	2020가합5452	2021-11-1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160	2017가합568397 2018가합506440(병합) 2018가합506457(병합)	2021-11-1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61	2020가합880	2021-11-11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62	2020가합4817	2021-11-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인용
163	2020가합4480	2021-11-1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64	2019가합57052	2021-11-18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65	2021가합241	2021-11-19	청주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66	2021가소1091856	2021-11-2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67	2020가합59135	2021-11-25	광주지법	1심	손배	기각
168	2020가합110732	2021-11-25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69	2020나2008512	2021-11-25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170	2021나12298	2021-11-26	수원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71	2019가단26733	2021-11-30	전주지법	1심	손배	기각
172	2020가합108527	2021-12-01	대전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73	2020가합5414	2021-12-0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74	2020가합519000	2021-12-0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75	2021가합101	2021-12-02	서울북부지법	1심	반론	기각
176	2021나51281	2021-12-09	청주지법	2심	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77	2020가단5248271	2021-12-1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78	2021가합33831	2021-12-1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79	2020가합247 2020가합254(병합)	2021-12-1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80	2020나2025036	2021-12-1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81	2020나2025074	2021-12-17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82	2021가합71	2021-12-22	광주지법 해남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83	2021가단1533	2021-12-22	부산지법	1심	손배	기각
184	2021가단1588	2021-12-22	부산지법	1심	손배	기각
185	2021가단1595	2021-12-22	부산지법	1심	손배	기각
186	2020가단5005436	2021-12-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87	2020가합116303	2021-12-23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인용
188	2020가단305440	2021-12-24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